



행사스케치

고곡가시대 한국축산 심포지엄 개최

참고: 축산신문

고곡가시대 한국축산 심포지엄 개최



축산경영 안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인 고곡가에 따른 사료가격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과 축산신문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 11월 21일(월), 서울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대응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일본배합사료가격·축산안정기금 마쓰바라 상무이사의 '일본의 사료안정기금 운영현황'이라는 주제발표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과장의 '사료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축산경제연구

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병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 최윤재 서울대학교 교수, 권영웅 농협중앙회 부장, 정영세 전국배합사료가격조합장협의회 회장,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이사 순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발표된 내용 요약이다.

▲이병모 부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치솟고 있는 사료가격이 농가들을 짓누르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사료가격이 생산비의 8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대외변수가 국내 시장을 언제든지 흔들어놓을 수 있다. 완충장치가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① 농식품부 노수현과장의 주제발표
② 마쯔바라 상무이사의 주제발표

사료가격차보전사업 등을 통해 상당부분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국내 양돈농가 수가 10년 새 2/3나 줄었다. 특히 중소 양돈농가들은 자금여력 부족, 생산비 가중 등 여러 이유로, 문을 닫거나 대형계열화업체의 위탁 농가로 흡수되고 있는 형편이다. FTA가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 그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없다. 일회성 대책이나 수입대체 정책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도 사료안정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해당사자간 공동협력과 국가차원 지원을 통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정기금은 여러 축종이 함께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안된다고 하면, 양돈만이라도 먼저 시행할 의향이 있다.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사료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희농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계약재배를 늘리고, 품질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해외 사료자원 개발 역시, 사료가격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연해주의 경우 면적, 노동력, 운송비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곡물공급 기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한우의 경우 28개월령 이상 사육하는 것은 과도한 사료비 부담을 불

러오게 한다. 고급육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고영양소가 곧 양질사료라는 등식을 떨쳐내고, 사료이용률 개념을 적극 도입, 사료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료업체들은 다품목 소량생산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사료안정기금 등 정책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소총과 장총, 즉 장단기 대책을 모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영웅 부장(농협중앙회)=여러 업체들이 해외곡물 기지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성공사례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 실패는 훌륭한 교재가 된다. 정부가 이를 묵어서 제공했으면 한다. 특히 정부내 종합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시장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했으면 한다. 업체, 농가, 정부 등으로 테스트포스팀을 꾸려서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은 지속축산을 위해서 반드시 일궈내야 할 과제다. 학계, 협회 등이 최적 경제 출하체중을 끌어내고, 농가들이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육우의 경우 고급육 맛을 유지하면서도,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료업체들은 원료 구매창구를 정비해 각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치장 공동사용이라든가, 장기용선계약 등을 통해 제반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행사스케치

고곡가시대 한국축산 심포지엄 개최

▲정영세 회장(전국배합사료가공조합장협의회·부천 축협조합장)=FTA 관련 사료대책으로는 원료구입에 따른 관세철폐가 전부다. 환율, 곡물가 등 대외변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FTA 정책 일환으로 수입 사료곡물 가격상승 추세에서 충격을 완화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일본 사료 안정기금이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일본의 사료안정기금이 농협사료로부터 시작된 배경과 그효과는 무엇이고 이후 민간사료업계의 참여과정이 궁금하다. 또 민간사료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과 반응, 결과는 어떠한가. 통상보전제도는 적자임에도 대출을 받아 금년에 양축가에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상환방법과 함께 향후 이 제도가 지속될수 있을지도 묻고싶다. 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

▲김치영 이사(한국사료협회)=고곡가 시대를 이겨내려면, 옥수수를 대신할 DDGS, 소맥과 같은 대체 원료개발이 시급하다. 아울러, 사료효율을 높이고, 세제를 낮추는 게 대안이 된다. 다만, 세제와 금융의 경우 농가나 민간기업에게는 힘에 버거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사료의 원료구매자금 300억~400억원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 매출액 1% 수준인 8,000억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금리 또한 2% 이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부가세 영세율 영구적용과 사료원료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전환해 줬으면 한다. 사료 안정기금의 경우, 결국 쌀 때 모았다가 비쌀 때 푼다는 개념이다. 단기적으로는 꽤 효과적이지만, 현재처럼 변동폭이 클 때는 미비하

다. 더욱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기금적립이 잘 될지 의문이 든다. 일본의 배합사료업계 일각에선 이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유명 경제학자는 “시장에 싸우기 보다는 순응하라”고 했다. 오히려, 기금을 통한 미래대비 보다는 시장에 직접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노수현 과장(농림수산식품부)=사료 안정기금이라는 게 한번 걷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거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농가들이 그만한 돈을 매년 거출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또한 거출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가는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료가격이 앞으로도 지속 상승한다고 봤을 때, 안정기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축산업 주인은 농가다.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정부분 도와주는 수준이다. 업계 역시,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득실을 계산하게 된다. 사료가격도 마찬가지다. 해외기지의 경우 단순 생산원가 비용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생산 이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나라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외 축산사료자원 개발 확충 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지원금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좌장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축산업이 살아남으려면, 농가를 비롯해 업체, 학계, 정부 등이 사료가격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정부의 한정된 예산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